법률교육과 법률가 충원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

- 법조인의 전문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의 전제 조건으로서 -

법률 제도가 수행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길게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경제 활동 주체들이 역동적, 전향적으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법률가의 창의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고, 정치적 견해가 자유로이 표출되며, 사회적 갈등이 정의롭게 해결되는 절차를 담보하는데에도 법률가가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률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골고루 배출되어 이들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그 사회의 제도 운영에 적절히 반영되고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 제도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의 자질과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그 스스로 고립되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

또한 대외관계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의 협상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에도 우리 법률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률 서비스 산업 자체가 국제적 시장을 무대로 영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법률가들이 국제적 법률 시장에 진출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와 준비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법률 제도와 법률가의 역할은 일차적으로는 국내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지만, 편협한 국내적 시각만으로 법률가 양성과 충원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 글은 국제경쟁력을 지닌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 필수적 전제 조건이 결여된 상황에서 지엽말단적 ‘처방’과 ‘비결’을 논의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I. 현행 제도의 문제점

거듭 지적되고 있지만, 국가가 시행하는 일회성 시험(사법/변호사 시험)에 의존하여 법률가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현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다. 국가 시험 외에는 어떠한 평가 기제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은 오랫동안 일종의 도그마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상상력을 지배해 왔다. 그 결과, 능력을 가늠하는 합리적, 제도적 방법이 마치 국가시험 밖에 없는 줄 아는 후진적이고 편협한 담론이 반복되고 재생산 되었으며, 그로부터 생겨나는 국가 시험에 대한 맹신이 많은 관료들과 적지 않은 법률가들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다.

국가 시험 당락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의 법률가 선발 제도 하에서는, 학교(학부가 되었건, 로스쿨이 되었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평가는 그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게다가 국가 시험이 당락(pass/fail) 뿐 아니라, 등수까지 부여하는 경우라면 그 시험에서 고득점을 획득하는 것에 모든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로스쿨 자체가 시험 학원으로 전락하거나, 로스쿨에 등록한 학생들이 또 다시 시험 학원을 기웃거리는 사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각 로스쿨 졸업생의 국가 시험 합격율, 국가 시험 석차 등을 근거로 하여 로스쿨 간의 수직적 등수매기기가 고착될 것이다. 국가 시험 맹신에 사로잡힌 논자의 안목으로는 로스쿨의 수직적 서열화가 불가피하거나, 심지어는 마치 바람직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제도 개혁을 주도하는 우리 인사들의 안목이 이 수준의 저열함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우리 법률 문화의 수준이요, 우리 사회의 인재 풀(pool)이 가지는 한계라고나 할까.

II.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제 조건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i) 영어 구사 능력 배양, ii) 통상, 외교, 국제거래 등에 관련된 교육 확충 및 강화, iii) 외국 기관이나 외국 법률사무소 등에서의 수습 교육, iv) 교환 학생, 교환 교수, 공동 학위 제도 등 국제적 인력 교류의 상시화 등 여러 진부한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국가 시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제도적 구조 자체에 변화가 없다면, 이 모든 논의는 위선적 시늉으로 전락할 뿐이다. 로스쿨 인가 신청 단계에서 신청 대학들이 너나할 것 없이 모두 내세웠던 이른바 ‘특성화’ 전략이라는 것이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로스쿨의 입학생 선발부터 로스쿨 운영의 전 과정에서 과연 각 로스쿨이 자신이 내세웠던 특성화 전략을 진정으로 추구하며 그에 도움이 되는 판단과 교육과정 운영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오로지 변호사 시험 합격을 제고에 도움이 되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만을 내부적으로 획책하고 있는지는 스스로를 솔직히 돌아볼 능력이 있는 자라면 당장 알 수 있을 것이다.

법률 교육 담당자부터가 이미 이런 식의 천박한 판단과 선택을 하는 마당이므로, 로스쿨 학생들이 국가 시험 합격에 당장 도움이 안되는 과목 수업이나 국제적 법률 시장에서 요구되는 능력과 경험을 습득하는데 진정으로 투자할 것으로 막연히 전제하거나 기대하고 이런 저런 논의를 펼치는 것은 낙관적 세계관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자기 기만적 술수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관련 과목을 국가 시험에 어

편 형태로든 포함시키거나 반영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더 한심하다. 국제경쟁력은 천편 일률적인 국가 시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험에서 해방되어야 비로소 길러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희생을 무릅쓰고 로스쿨 제도를 어렵사리 도입 해 놓고선, 또다시 법률가 선발을 국가 시험 한판으로 결정짓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발상이며, 모두에게 불행한 선택이 될 것이다. 국가 시험으로 법률가를 선발하려는 시도는 법률교육 기관의 다양한 역할을 무시하고 그 가치와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에 대한 불신과 국가 시험에 대한 맹신은 서로가 맞물려 파괴적 상승작용을 통하여 끝없이 재생되고 증폭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가 시험 맹신으로 일관해 온 결과, 법률 교육 기관에 대한 불신은 이제 국가 시험에 대한 맹신 만큼이나 골이 깊고, 강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 사태를 타개하려면, 법률 교육 및 평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혁과 개방을 통하여 법률 교육 수준과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개선을 통하여 법률 교육기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국가 시험에 대한 맹신을 완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국가 시험의 지배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되어야 비로소 각 법률 교육기관이 창의성과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될 수 있다.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이처럼 각 교육기관이 다양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전통이 뒷받침 될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모든 로스쿨이 기껏 국가 시험 합격에만 목을 메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수준의 질 높은 교육과 활발한 국제 교류를 아무리 외쳐본들 반향 없이 사라질 허무한 공염불에 불과하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럴 시간이 있으면, 국가 시험 합격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이며, 로스쿨의 입장에서도 국가 시험 합격을 제고를 이미 공공연한 지상과제로 삼고 입학 사정과 학사 운영 전략이 수립되는 마당이므로, 특성화나 국제 교류를 ‘활성화’ 하는 행위는 국가 시험 합격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배격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합리성과 자기 이익 추구 성향을 무시한 채, 이상론에 치우친 제안을 거론하는 것은 위선과 가식이 창궐할 토양을 제공하는데 불과하다. 이른바 ‘특성화’ 소동이 이미 참담한 실패의 징조를 여지 없이 드러내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안일하게 운운한다는 것은 무책임과 위선의 극치라고 하겠다.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진정한 노력은 현재와 같이 국가 시험에 의존하는 법률

가 선발 제도가 유지되는 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는데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 시험에 대한 맹신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야 법률 교육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고,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국가 시험에 대한 맹신을 완화시키려면, 법률 교육기관의 신뢰성을 높이는 길 밖에는 없다. 이하에서는 법률 교육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법률 교육과 평가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교육기간 동안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는 더 이상의 국가 시험 부담 없이 법률가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서 유럽 여러 나라, 호주, 캐나다 등이 모두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요원하다고 생각한다.

III. 법률 교육과 평가의 신뢰성 향상

각 과목 담당 교수가, 자신이 제시한 강의 개요에 따라, 한 학기 동안 강의하고, 자신이 출제하고, 자신이 채점하여(직접 채점한다면), 자신이 성적을 부여하고, 학생의 문의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자신이 혼자서 처리하고, 성적 확정 기간이 도래하여 성적이 확정되면,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과목의 교육과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점검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폐쇄적, 주관적, 독단적 학사 운영이 현재 우리의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상황이다. 비록 이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익숙한 풍경일 수는 있으나, 고등 교육의 품질 관리(quality assurance)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매우 뒤처지는 면이 있다.

모든 과목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률 기초 과목’이라 할만한 핵심 과목들의 경우에는 종래와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법률 교육의 품질 관리와 성적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

가. 법률 기초 과목의 선정

각 학교마다 법학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을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정해 두었겠지만, 그것은 해당 학교의 학위 수여 요건에 불과하다. 학교별 필수 과목과는 별도로 우리의 법률 실무가들과 법률 교육제공자들의 대표성 있는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공동으로 결정되고, 약 5년 마다 주기적으로 재 점검되는 법률 기초 과목이 정해질 필요는 있다. 즉, 법원, 변호사 단체, 로스쿨 학장단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법률가 양성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법률 기초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은 우선 법률 실무계와 법률 교육계 간의 상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상징적으로 표시하는 의미가 있다. 소통과 참여 없이 신뢰가 쌓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법률 교육에 대하여 실무계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거나, 법학계가 외부와는 답을 쌓고, 심지어는 다른 학교들과도 답을 쌓은 채, 자신들만의 배타적 커리큘럼을 고수한다거나 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모든 로스쿨의 커리큘럼이 획일화, 평준화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각 학교마다 필수/선택 과목을 나름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 나라의 법률가 단체와 법조계 그리고 법학 교육계가 공동으로 논의하여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법학교육의 핵심 사항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와 의견 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러한 작업은 학생들에게 재학중 반드시 역점을 두어 공부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원론적 수준에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각 학교가 정하는 필수/선택 과목도 학생에게 나름의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겠지만, 비 본질적인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학교가 제시하는 필수 과목이 안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필수 과목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에게 되도록 많은 선택의 여지를 주고자 하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오로지 주변 과목이나 지엽말단적 과목만을 수강하고 졸업하라는 것이 그 진정한 의도는 아닐 것이다. 법조인과 법률교육 단체가 공동으로 법률 기초 과목을 선정하여 제시하는 경우, 각 학교가 교과과정 편성에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를 보장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유용한 수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법률 기초 과목 통합 운영 방안

각 기초 과목은 학기 별 강좌 형태로 분산되어 제 각각 운영될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 전체에 대한 강의 개요(syllabus)가 각 로스쿨 마다 그 과목 교수들의 합의로 확정되어 공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전체에 대한 공통 syllabus와 참고도서 목록을 해당 학교 헌법 교수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확정하고, 주기적으로 재 검토하여 업데이트 시켜 유지해야 한다. 물론 헌법 전체를 1 학기에 마칠 수 없으므로, 헌법 syllabus에는 각 학기별로 커버되는 부분이 표시될 것이다.

이처럼 과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syllabus를 해당 과목 교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강의 개요와 참고도서 목록이 비교적 자세히 제시된다고 전제할 때, 그 과목 강의를 실제로 누가 담당하든 syllabus에 제시된 주제들은 반드시 다루게 되므

로 강의로 커버되는 주제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각 교원 간 강의주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둘째, 각 기초 과목 전범위를 대상으로 출제되는 과목별 종합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종합시험의 출제 범위는 각 교원이 자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 교원이 모두 합의한 syllabus 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다. 기초 과목별 종합시험

학기별 강좌가 끝날 때 해당 강좌를 담당한 교원 자신이 임의로 출제하여 치르는 기존의 학기말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관리되는 기초 과목별 종합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종합시험의 문제 출제, 채점, 성적 처리, 성적에 대한 문의 및 이의 신청 처리 절차 등에 적용될 엄정한 통합 관리 체계를 고안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매년 그해의 각 해당 과목 종합시험 출제와 채점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게 될 출제 교수(examiner)를 선임한다. 현재 국내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업 평가는 강의를 담당한 교수가 자신의 수강생들만을 상대로 시험을 시행하고, 자신이 성적을 부여하고, 어느 누구도 점검이나 검증이 불가능한 폐쇄적, 독단적 체제임에 반하여, 필자가 제안하는 기초 과목 종합시험은 강의 담당 교수와 출제 교수를 가급적 분리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강의와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강의 품질 관리와 시험 성적 평가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아래 설명될 내용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출제교수 선임은 적어도 시험 시행일 2달 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 출제교수의 출제 초안을 검토하고 그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할 출제심의교수(assessor)도 선임되어야 한다. 즉, 종합시험 출제는 과목 별로 2인의 교수가 관여하되, 출제 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시험 문제는 과목별로 약 6-7개를 출제하고, 응시생이 그 중 4개를 선택하여 3시간 동안 답할 수 있는 분량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각 기초 과목별 시험문제 초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해에 실시되는 모든 기초 과목의 출제교수와 출제심의교수들이 참석하는 시험관 회의(examiners meeting)에서 각 과목 문제에 대한 최종 점검을 거쳐 그 해의 문제를 과목 별로 확정한다.

기초 과목 종합시험의 실시 시기는 학교별로 적절한 선택이 가능할 것이다. 로스쿨 2학년 말에 일제히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2학년 말과 3학년 1학기말에 나누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1학년 말과 2학년 말에 분산 시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각 해당 과목의 강의를 개설되는 시점과 학생들의 준비 기간, 장래 진로 설계에 필요한 여유 기간 제공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각 학교가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라. 종합시험 채점 및 성적 처리 절차

기초 과목별 종합시험은 해당 과목을 수강한 그 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시에 시행된다. 각 교수의 개인적인 감독과 관리 하에 시험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과목별로 그 학교 전체가 문제 출제 및 시험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형태로 시행되는 것이다. 채점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한다. 1차 채점은 출제교수가 담당하고, 2차 채점은 출제심의교수가 담당한다(물론, 1차 채점 결과를 모르도록 한 상태에서 2차 채점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자의 평가에 일정 수준이상의 차이가 있는 답안에 한하여 3차 채점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도 있다.

2회(또는 3회)의 채점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하여 성적이 결정되면, 그를 근거로 평점(A+, A, B, C, D, F)을 배정한다. 과목별 학점 분포 비율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로스쿨 들은 모두 이 비율을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그 해에 시험이 실시된 기초 과목들에 대한 평점 배정은 성적 사정을 위한 시험관 회의를 개최하여 각 과목 별로 채점 결과를 재 점검하고, 시험관 회의의 결의를 통하여 평점을 확정하고 공표한다.

채점에 대한 문의나 성적에 대한 이의는 개별 교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 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유를 소명한 서면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면, 시험관 회의에서 이를 취합하여 각 경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결의하고, 이 결의에 따라 성적 이의 신청이 처리되도록 한다. 채점 결과가 누락되었다거나, 채점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사무 착오가 있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 사유가 있다면 재 평가가 이루어져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 채점은 허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마. 종합시험에 대한 외부 검증 제도

성적 처리가 완결되면, 각 과목의 출제 문제와 답안지는 다른 대학교의 해당과목 교수(외부심사교수; external examiner)에게 보내어 사후 검증을 받는다. 외부 심사교수는 출제 문제의 난이도, 출제 문제가 커버하는 주제들이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답안에 나타나는 학업 성취도를 점검하고, 응시생들이 선택하여 답한 문제들에 혹시 쓸림 현상이 있는지(너무 쉬운 문제에 대한 쓸림, 또는 제대로 교육 되지 않은 주제를 다른 문제에 대한 기피 현상) 등을 살펴보고, 무작위로 추출된 일정 수의 답안지에 대한 채점 결과와 성적 배정

결과를 검토하여 성적 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한다. 그리고, 학생들 답안의 전체적 수준을 보았을 때, 그 학교가 결정한 학점 배분 비율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평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답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학교에서 A 또는 A+ 학점 부여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정해두고 있다면 이런 사태는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외부 심사교수는 연속하여 3년 이상 같은 학교에 의하여 선임될 수 없도록 하고, 심사보고서는 반드시 공개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학 기초 과목의 경우, 시험문제와 외부 심사보고서, 성적 배정 비율 및 결과를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각 로스쿨이 수행하는 교육과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 교육을 총괄하는 법학교육위원회(법조인과 법률교육기관 등이 모두 참여하는)는 이러한 외부심사교수의 심사보고서를 모니터하고, 특히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학교의 해당 과목에 대하여는 적절한 실사나 사실 조회 등을 거쳐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 법률 교육과 평가의 전반적인 신뢰성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IV.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 방안

필자가 제안한 이러한 종합시험 제도는 지금까지 우리 대학의 교원들이 행해 오던 시험 및 평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준의 제도 정비와 교수 개개인의 노력과 긴장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로스쿨에 개설되는 모든 과목에 대하여 이런 수준의 시험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법률 기초 과목으로 지정되는 과목들에 한하여는 이런 수준의 노력과 변혁을 법학 교수들이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수십년간 해오던 방식대로 교수가 혼자 출제하고(그것도 시험일 직전, 또는 그 당일날 졸속으로 출제하고), 채점은 심지어 조교에게 맡기는 사례까지 있고, 성적 처리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적절히 무마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학사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이것이 과연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수준의 대학교육이라 할 수 있겠는지를 솔직하고 분명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해 오던 식으로 앞으로도 로스쿨의 성적처리가 계속 된다면, 그 결과를 무턱대고 신뢰하라는 요구를 내세울 근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의 자율이 아니라 국가시험 맹신에 근거한 철저한 타율로 일관하는 현 체제를 타파할 아무런 돌파구도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이 종합시험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엄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를 불신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학 교원들 스스로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 비로소 대학의 자율을 조심스럽게 주장할 약간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고, 그것에 기초하여 로스쿨 졸업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제도는 다음과 같이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변호사자격 시험은 법률 기초 과목과 법조 윤리에 대하여 실시하면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에서 법률 기초 과목 종합시험에 이미 응시하여 B 학점 이상을 획득한 과목에 대하여 또다시 변호사자격 시험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이 그 과목을 재차 평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이 수행한 평가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가시험으로 새로 평가하자는 발상은 로스쿨에서 이루어진 종합평가를 위한 모든 노력과 상호 검증 제도 등을 철저히 불신하자는 말 밖에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학의 교수들이 평가의 엄정성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해 본 바도 없으므로 당연히 불신 받아 마땅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노력과 제도 정비가 이루어진 연후에까지 로스쿨의 평가를 불신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변호사자격 시험은 로스쿨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나 상호 검증(외부 검증)을 받으며, 실시한 기초 과목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과목이거나 (기초 과목이 그 학교의 필수 과목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C 학점 이하를 받은 과목에 한하여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 교육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믿을 만한 수준으로 이미 확보한 학생들에 대하여 또다시 국가 시험을 모두 거쳐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법률 교육 과정 전체를 형해화할 우려가 명백하므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률 교육자들 스스로가 신뢰 확보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온 지난 수십년 간은 법률 교육 과정이 불신되고, 수험 학원에 의하여 정규 교육 과정이 유린되는 불행한 사태가 거듭되었지만, 이제는 이 사태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각 로스쿨이 성적 배정 비율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가지지는 하지만, 그 배정 비율은 공개되고, 각 과목별 성적 처리 결과에 대한 외부 심사교수의 심사 의견도 공개되므로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학점 인플레이션을 자행하는 로스쿨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고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과도기적 조치로서 C 학점 이하의 학점이 부여되어야 할 수강생의 최저 비율을 법학교육기관의 장들과 변호사 단체 등의 협의하여 제시할 수도 있겠다.

이른바 변호사자격 시험이라는 제도는 로스쿨에서 해당 기초 과목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학생에 대한 검정시험으로서, 마치 영국의 CPE (Common Professional Examinations) 제도와 같이 운영되면 족하다. 이것이야말로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도입된 법률 교육 개혁의 진정한 취지를 구현하는 길이다.

로스쿨 제도가 있는 미국에도 변호사자격 시험 제도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논자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 주에 변호사자격 시험 제도가 있으므로 우리도 변호사자격 시험을 일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유치하고 피상적인 비교에 의존한 그릇된 생각이다. 미국의 변호사자격 시험 제도가 가지는 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이른바 하류 로스쿨은 변호사자격 시험 합격률 제고에 크게 투자한다. 따라서 하류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자격 시험 합격률은 이른바 일류 로스쿨 보다 훨씬 높다. 즉, 변호사자격 시험 합격율과 로스쿨의 서열과는 전혀 무관하다. 상위권 로스쿨은 자신의 졸업생들의 변호사자격 시험 합격율에 대하여 “진정으로” 무관심하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이럴까?

변호사자격 시험을 무조건 강요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사태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미국이 하므로 우리도 무조건 변호사자격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의 무책임함과 천박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 법률가의 국제경쟁력 확보

법률 교육 제도 전반이 참담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있고, 모든 것이 국가 시험 합격 여부에 달려 있는 현 사태를 그대로 놔 둔 채, 영어 교육을 강화하라느니, 국제 법무에 관련된 과목을 증설하거나 외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라는 등의 한가한 이야기를 안일하게 늘어놓는다고 해서 법률가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제공하는 교육, 자신이 수행하는 평가가 신뢰받지 못하는 사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외면하고 체념한 채, 그저 자신의 영역을 남이 간섭하지만 말아주기를 원하는 치졸한 대학 교수들이 우리 법률교육 제도를 지배하는 한, 법률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요원하다.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대학의 법률 교육 전반이 국제적 수준으로 체질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학 교육의 품질관리가 형편없이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경쟁력만을 제고할 수 있는 무슨 묘방이나 비책을 기대할 수는 없다.

대학이 제공하는 법률 교육의 수준 향상은 법학교수들이 스스로 그 개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 로스쿨 제도를 아무리 도입해 본들, 자기가 담당한 과목의 시험 당일 날 무성의하게 출제하고, 채점은 조교에게 맡기고, 성적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이 있으면 슬그머니 “+”하나 붙여주는 식으로 성적을 변경해주고 넘어가도 아무런 뒷탈이 없는 지금같은 실상이 그대로 지속되면, 우리 법조인력 양성 제도의 장래는 암울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지엽 말단적 묘책이나 비법이 아니다. 자신과 자신의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솔직히,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교정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신속하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문제점을 적당히 덮어두고, 고상한 담론으로 허황된 논의를 거듭한다고 해서 찬란한 미래가 열리고, 법률가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